



[산업]
LG전자
수제맥주 제조기
'홈브루' 출시
06



日 수출규제의 역설… D램 값 폭등

반도체 중장기 성장 가능성에
삼성·SK하이닉스 주가 상승
DDR4 8G 3.6달러 수준 '폭등'

日 추가규제, 분쟁 장기화 우려
관련 그룹사들, 비상경영 가동

일본 수출 규제가 반도체 업계에 '뜻밖의 호재'로 작용했다. 공급 과잉 해결로 가격이 반등하면서 시장도 회복세로 돌아섰다. 다만, 한일간 외교 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피해 업종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관련기사 3면〉

16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최근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한달여만에 4만6000원선을 돌파했으며, SK하이닉스는 2개월여만에 7만6000원을 넘어서졌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반도체 산업 위기론과는 예상 밖의 결과다.

일본 수출 규제가 오히려 국내 반도



16일 오후 일본산 제품 판매중단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365싱싱마트 매장 밖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체 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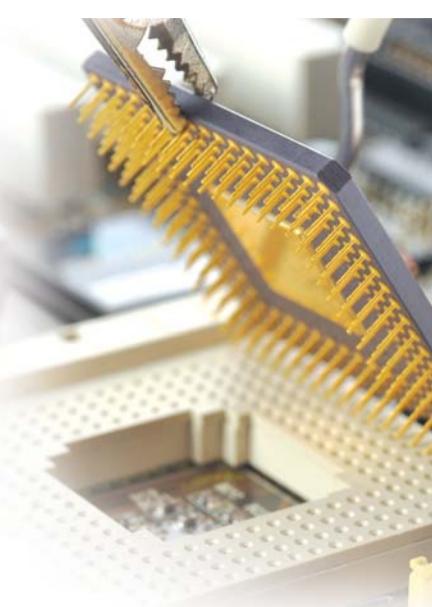
시장도 안정됐다. 업계가 잇따라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선언하는 가운데, 공급 불균형이 우려되면서 서버 업계도 물량 확보에 나서기 시작해 낸드플래시뿐 아니라 D램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 PC 부품 소매상들이 재고가 부족하다며 D램 가격을 수시로 올려 파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D램의스체인저에 따르면 DDR4 8G 평균 가격은 3.6달러 수준으로 올랐다. 지난달 3달러선 붕괴까지 우려됐던 점을 감안하면 폭등이라 부를만 하다. 낸드도 최근 상승전환 후 128Gb MLC 기준 4달러를 다소 밀도는 수준을 유지 중이다.

일본 수출 규제가 오히려 호재로 인식된 셈이다. 증권가에서도 반도체 시장이 다시 회복기로 접어들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키움증권 박유악 연구원은 "한계치에 근접한 3D 낸드 가격과 도시바 정전으로 인한 공급 추가 감소, 일본의 수출규제가 구매 심리에 불을 지피며 재고의 급격한 소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도체 업계) 실적 턴어라운드와 반도체 소재 업종에 집중할 것"을 추천했다.

실제 업계 피해도 예상보다는 크지 않은 눈치다. 그룹별로 총수 지휘체제 하에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면서다. 이미 지난해 말 조짐을 읽고 발빠르게 움직인 곳도 있었다.



두면서 수출 규제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다녀온 후에는 위기감도 더 커졌다. 이 부회장은 입국 직후인 13일 사장단을 소집해 스마트폰과 TV 등 비반도체 분야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이 부회장이 일본에서 추가 규제 가능성을 확인하고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이 부회장이 일본 재계와 금융권 인사들과 두터운 인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현지 출장에서 수출규제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았겠냐는 얘기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제3인터넷은행' 이번엔 나올까 10월 접수… 연내 2곳 인가예정

금융당국, 전원 탈락 없도록 지원
토스·키움, 재도전 아직 결정안돼

금융당국이 제3인터넷전문은행(이하 제3인터넷은행)에 대한 인가를 다시 추진한다. 오는 10월 신청절차를 밟아 연내 최대 2곳이 예비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가절차의 전체 큰 틀은 유지하지만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이 추가됐다. 상반기와 같이 신청자 전원이 탈락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인가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금융당국이 평가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가 개수나 인가절차, 심사기준 등 기준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은 유지한다. 오는 10월 10일에서 15일까지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받아 최대 2개사에 대해 신규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심사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다. 늦어도 연내 결과가 나오게 된다.

반면 인가운영방식은 일부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 전요섭 은행과장은 "상반기 인가추진 절차의 연장선에서 이번 신규 인가를 재추진하는 것이므로 인가절차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그동안 제기됐던 지적사항들을 감안해 인가 심사과정에서 금융위와 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이번 인가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를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바꿨다. 만약 필요하다면 외평위 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 답변 등을 해야 한다.

전 과장은 "원칙적으로는 외평위가 내놓은 결론을 금융위가 바꿀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금감원과 외평위의 심사 결과를 존중해 왔다"며 "외평위원 비공개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규 인터넷은행의 경영주체가 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아니라도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든지 경영주체가 될 수 있다"며 "영국과 중국, 일본의 사례처럼 전자상거래, 스마트가전, 유통 분야의 업체들도 협행법상 인터넷은행의 경영주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고배를 마신 토스와 키움 측은 예비인가 재도전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임 꼭 다문 신동빈, 롯데 사장단 회의 참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타워로 들어서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손진영 기자 son@

상장주관사 규제 풀어 모험자본 공급 늘린다

금융위, 금융투자분야 규제개선

PEF·헤지펀드 지분계산 일원화
RP 편입 가능한 외화자산 확대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상장 주관 업무를 제한했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 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기업보유 지분율 계산방식을 통합한다. 증권사의 상장 주관 업무 제한을 풀기 위해서다.

또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내 편입 가능한 외화자산을 확대하고 K-OT C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 위도放宽한다.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모험자

본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금융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분야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안창국 자본시장과장은 "금융투자업계와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20개 가량의 건의사항을 받았다"며 "그중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PEF와 헤지펀드의 기업 보유 지분율 계산 방식을 PEF 방식으로 통합한다.

현재 금융회사를 포함한 증권사는 예비상장기업의 지분율이 5% 이상이거나 증권사 계열 금융회사를 모두 포함한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상장 주

관업무를 할 수 없다. 예비상장기업 주식을 보유한 증권사가 상장 주관 과정에서 공모가를 과도하게 산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경우 증권사는 중소 벤처 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상장주관 업무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PEF지분율은 증권사의 펀드 출자비율과 해당 펀드의 기업 보유지분을 감안해 계산하지만 헤지펀드는 출자비율과 관계없이 기업 보유지분을 모두 합산한다. 증권사가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헤지펀드라면 지분율이 높아져 주관업무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